

감 사 보 고 서

－ 학교시설 석면 위해성 평가 및 안내서 개정 실태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정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0. 3.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및 중점	2
3.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2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3
1. 석면의 정의와 사용 또는 금지실태	3
2. 석면건축물 관리 법령 및 기준	4
3.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연혁	4
4.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순서	5
III. 감사결과	6
1. 감사결과 총괄	6
2. 통보사항	8
(1) 석면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감독 부적정(통보)	9
(2) 이해관계자의 안내서 개정작업 참여 부적정(통보)	20
[별표] 감사 미실시 사유 명세	25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교육부는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을 제·개정하고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의 가이드라인과 안내서를 제작·보급하는 등 학교시설에 대한 석면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소속 A 등 512명)은 각급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감독, 안내서 개정과 활용, 석면 지도¹⁾와 석면감리인, 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 등과 관련하여 [표 1]과 같이 7개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2019. 8. 19.) 하였다.

[표 1] 공익감사청구 사항

구분	청구사항(검토 결과)
1	석면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감사실시)
2	□□ 협회장의 안내서 개정작업 참여 부적정(감사실시)
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개정 부적정(기각, 종결처리)
4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활용 부적정(기각, 종결처리)
5	석면 지도 재검증 절차 이행 여부(기각, 종결처리)
6	석면감리인에 대한 소극적 처벌 여부(기각, 종결처리)
7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 부적정(기각, 종결처리)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석면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과 ‘□□ 협회장의 안내서 개정작업 참여 부적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 석면 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함

나머지 5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종결 처리 ([별표] “감사 미실시 사유 명세” 참조)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2020. 1. 31.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감사대상 및 중점

이번 감사원 감사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석면 위해성 평가 및 관리,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개정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였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였다.

3.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감사원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부서로부터 협조를 받아 청구인이 제기한 21개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 실태 및 적정성을 점검한 후 2020. 2. 3.부터 같은 해 2. 11.까지 7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감사원의 내부 검토를 거쳐 2020. 3. 12.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 업무 현황

1. 석면의 정의와 사용 또는 금지실태

석면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 100만 년 전 화산활동에 따라 생성된 화성암의 일종이고 직경이 $0.02\sim0.03\mu\text{m}$ 로 사람의 머리 카락 직경보다 5,000배 더 작다.

위와 같은 석면은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약산성을 띠고 있어 건설, 자동차 제조 및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었다.

그러나 비산(飛散)이 잘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표 2]와 같이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와 같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여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987년 1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 1. 1.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표 2] 주요 석면 질환의 특징

명칭	잠복 기간	특성
석면폐	1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의 섬유화를 초래하는 진폐증의 일종 마른 기침, 점액성 가래, 피로감, 체중감소 석면 노출 후 호흡곤란이 서서히 진행 5~45%는 폐암으로 발전
폐암	10~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에 암세포의 발생으로 인한 조직 이상 석면폐를 동반하면 폐암 가능성 높음 호흡곤란, 피로감, 체중감소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50배 이상 큼
악성 중피종	20~4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흉막 및 복막에 생기는 양성종양 급속진행 발병 후 1년 이내 사망 복부 통증, 가슴 통증, 호흡곤란 피로감, 식욕감퇴

자료: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에서 발췌·재구성

2. 석면건축물 관리 법령 및 기준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는 건축물 석면 조사 및 조치,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주변 환경 관리, 석면감리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석면안전관리법」을 근거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등 다수의 규칙과 기준,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3.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연혁

교육부는 2005년 11월 학교시설 내의 공기 질 유지·관리 대상에 석면을 추가하고, 2008년 10월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을 마련한 이후 2019년 1월 현재 까지 이를 5차례 개정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2014년부터 석면건축물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석면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학교 건축물의 석면 제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18년 5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9년 5월 안내서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학교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절차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식 및 방법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4.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순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표 3]과 같이 크게 계획 수립, 설계·집행, 해체·제거 단계로 이루어지고 단계별로 발주자(학교), 해체·제거업자, 감리인, 석면 모니터단의 과업이 가이드라인과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다.

[표 3]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작업 단계별 과업 내용

구분	과업 내용
계획 수립	▪ 대상 학교 선정 → 작업 범위 및 집행 시기 결정 → 예산편성 및 배정
설계·집행	▪ 과업지시서 작성 → 감리인 선정 → 석면 지도 적정성 검토(감리인) → 해체·제거업자 선정 → 석면(비산)농도 측정기관 선정 → 폐기물처리업자 선정 → 석면 모니터단 구성
해체·제거	▪ 작업계획서 작성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설명회 개최 → 집기류 이동 및 사전 청소 → 비닐 보양 및 밀폐 → 설비 해체·제거 → 석면 해체·제거 실시 및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 폐기물 처리 석면농도측정 및 보양 제거 → 청소 후 잔재물 조사(석면 모니터단) → 결과보고 홈페이지 게시

자료: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에서 발췌·재구성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청구인이 제기한 7개 사항 중 감사실시가 결정된 2개 사항(석면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 협회장의 안내서 개정작업 참여 부적정)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개선사항 2건이 확인되어 통보하였는데 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석면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감독 부적정

- 교육부는 학교의 석면건축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각급 학교와 시·도교육청을 지도·감독
 - 2019년 6월 말 기준 9,936개 학교(전국 학교의 47.8%)에 석면건축물이 존재(1개 학교 높음 등급, 53개 학교 중간 등급)하고, 교육부는 매년 2,8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할 예정
- 청구인은 석면 위해성에 대한 부실 평가가 심각한 21개 학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2019. 8. 19.)
- 이번 감사에서 19개 학교(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된 ▷▷초, ▽▽초 제외)를 점검한 결과
 - 16개 학교에서 실별이 아닌 층별로 석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계 726개 지점의 평가가 누락
 - 18개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가 부실(석면의 손상 및 비산성이 있는데도 0점 처리)하였고, 특히 4개 학교(◁△초, ◇◇초, ♥♥고, ♡♡고)는 중간 등급인데도 낮음 등급으로 평가

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석면 위해성 평가 누락 또는 부실과 관련한 학교(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19개 학교)와 소관 시·도교육청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석면 위해성 평가 부실 및 관리가 지적된 18개 학교의 점수를 수정·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중간 등급인 4개 학교에 대한 긴급·적정 조치 포함)을 마련하며, 석면건축물이 있는 학교(2019년 6월 기준 9,936개 학교) 중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점검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 실태 및 적정성을 점검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나. 이해관계자의 안내서 개정작업 참여 부적정

- 교육부는 2018년 5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9년 5월 안내서로 개정
 - 청구인은 석면감리인의 역할을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가이드라인과 안내서에 포함하였으며, 이해관계에 있는 □□ 협회장을 안내서 개정작업에 참여시켰다며 공익감사를 청구(2019. 8. 19.)
- 이 건 가이드라인과 안내서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단계별로 석면감리인의 안전관리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작업 범위, 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석면 해체·제거 감리 과업지시서(예시)”가 수록
 - □□ 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석면감리인의 능력 함양 및 권익 보호가 협회의 설립 목적으로, 감리인 경력의 관리 및 안전한 석면 해체작업을 위한 현장 감리 등이 협회의 사업으로 제시됨
- 또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는 감리 관련 기준의 제·개정 과정에 관련 협회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를 작성자 또는 감수자로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조화·반영
 - 따라서 이 건 안내서 개정작업과 □□ 협회 간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소지가 있어 협회의 관계자를 이 건 개정작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런데도 교육부는 □□ 협회의 협회장인 ●●대학교 B 교수를 안내서 개정작업에 포함 시켰고 B 교수는 의견 개진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의 업무 수행

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 협회 관련자를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개정작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별첨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석면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교육부
조 치 기 관 교육부
내 용

1. 업무 개요 및 공익감사청구 요지

교육부는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을 제·개정하고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의 가이드라인과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학교의 석면건축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66조, 「교육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각급 학교와 시·도교육청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6월 기준으로 전국 20,805개 학교의 47.8%인 9,936개 학교에 석면건축물이 있어 석면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표 1]과 같이 위해성이 높음 등급은 1개 학교, 중간 등급은 53개 학교, 낮음 등급은 9,882개 학교로 나타났으며, 교육부는 중간 등급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한 후 석면 해체·제거 계획에 우선 포함하게 하고 있다.

[표 1] 2019년 상반기의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

(단위: 개)

구분	전체 학교		석면건축물 학교		위해성 평가결과						무석면 학교	
					높음		중간		낮음			
	'14. 1월	'19. 6월	'14. 1월	'19. 6월	'14. 1월	'19. 6월	'14. 1월	'19. 6월	'14. 1월	'19. 6월	'14. 1월	'19. 6월
유치원	8,805	8,726	4,641	2,841	－	－	98	－	4,543	2,841	4,164	5,885
초등학교	6,205	6,274	5,272	3,637	－	－	144	20	5,128	3,617	933	2,637
중학교	3,228	3,226	2,679	1,853	－	1	74	20	2,605	1,832	549	1,373
고등학교	2,328	2,351	1,950	1,530	－	－	43	12	1,907	1,518	378	821
특수학교	183	228	119	75	－	－	6	1	113	74	64	153
합계	20,749	20,805	14,661	9,936	－	1	365	53	14,296	9,882	6,088	10,869
증감	56		△4,725		1		△312		△4,414		4,781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석면 함유 건축자재는 [표 2]와 같이 천장재(97.87%)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벽체 재료(0.94%), 칸막이(0.55%), 지붕재(0.42%), 분무재(0.12%) 순인데, 교육부는 2017년부터 매년 2,8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학교 건축물의 석면 제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표 2] 학교 건축물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 현황

(단위: 천㎡)

계	천장재	벽체 재료	칸막이	지붕재	분무재	기타
21,761 (100%)	21,297 (97.87%)	204 (0.94%)	120 (0.55%)	91 (0.42%)	26 (0.12%)	23 (0.01%)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 소속 A 등 512명의 국민(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8년 하반기 각급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2019. 4. 1. 기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해성 평가점수 누락, 같은 공간에 대한 평가결과 불일치, 교실별 평가결과기재 불이행, 유지·보수·관리 기재 부실 등이 나타났다면 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2019. 8. 19.)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석면 위해성 평가 부실이 심각한 21개 학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초등학교(경상북도 ■■■교육지원청)를 예로 들었는데, ▷▷초등학교는 교실별로 기재하여야 하는 석면 위해성 평가결과를 층별로 기재하고 석면 자재 손상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비산성, 손상 상태, 진동 및 사용 빈도 등의 점수를 누락하고서는 위해성 등급을 낮음으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관계 법령, 기준 및 매뉴얼

가. 관계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또는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하여금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이하 “석면 위해성 평가”라 한다)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시된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 고시)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나타난 위해성 등급(높음, 중간, 낮음)에 따라 [표 3]과 같은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표 3] 석면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위해성 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점 이상	<p><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 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 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19점	<p><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 제거 3)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 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 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점 이하	<p><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면 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 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 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 수행

자료: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에서 발췌·재구성

나.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에 따르면 석면 위해성 평가는 개별 석면 건축자재별로 ① 물리적 평가, ②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③ 건축물 유지·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이하 “건축물 평가”라 한다), ④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를 하고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① 물리적 평가

물리적 평가는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예상하는 것으로 [표 4]와 같이 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으로 세분하여 각각 평가하게 되어 있다.

[표 4] 물리적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단위: 점)

구분	등급	판단기준	점수
손상 상태	없음	▪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거나 손상을 보수한 경우	0
	낮음	▪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미만으로 미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 (예: 균열, 깨짐, 갈라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들뜸 등)	2
	높음	▪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이상으로 육안상 뚜렷한 손상이 있는 경우	3
비산성	없음	▪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0
	낮음	▪ 손상되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바닥재, 배관재, 지붕재, 천장재, 벽체 재료, 칸막이 등)	2
	높음	▪ 손상된 분무재, 단열재, 보온재, 내화 피복재	3
석면 함유량	20% 미만	▪ 건축자재의 석면 함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1
	20% 이상 40% 미만	▪ 건축자재의 석면 함유율이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 건축자재의 석면 함유율이 40% 이상인 경우	3

자료: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에서 발췌·재구성

②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는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손상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표 5]와 같이 진동, 기류, 누수로 세분하여 각각 평가하게 되어 있다.

[표 5]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단위: 점)

구분	등급	판단기준	점수
진동	없음	▪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또는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낮음	▪ 모터나 엔진이 있지만 거슬리는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경우 또는 간헐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1
	높음	▪ 큰 모터나 엔진이 있으며 방해적인 소음 또는 쉽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경우 (예: 공조실, 기계실 등)	2
기류	없음	▪ 손상 상태가 “없음”인 경우 또는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낮음	▪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예: 환기구, 선풍기, 에어컨 등)	1
	높음	▪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예: 엘리베이터 통로, 환기 및 급기팬이 설치된 지역)	2
누수	없음	▪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손상	▪ 누수에 의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명확한 경우	2

자료: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에서 발췌·재구성

③ 건축물 평가

건축물 평가는 건축물 유지·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표 6]과 같이 유지·보수 형태와 유지·보수 빈도로 세분하여 각각 평가하게 되어 있다.

[표 6] 건축물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단위: 점)

구분	등급	판단기준	점수
유지 보수 형태	없음	▪ 유지·보수 시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는 경우	0
	낮은 교란	▪ 직접적으로 석면 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지만 교란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석면 천장재에 설치된 전구를 교체하는 행위)	1
	보통 교란	▪ 유지·보수를 위해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경우 (예: 천장 위에 설치된 밸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들추는 행위)	2
	높은 교란	▪ 유지·보수를 위해 석면 건축자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경우 (예: 밸브 또는 전선 설치를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제거하는 행위)	3
유지 보수 빈도	없음	▪ 없음	0
	낮음	▪ 1년에 1회 이하	1
	보통	▪ 한 달에 1회 이하	2
	높음	▪ 한 달에 1회 초과	3

자료: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에서 발췌·재구성

④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은 [표 7]과 같이 사용 인원,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으로 세분하여 각각 평가하게 되어 있다.

[표 7]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단위: 점)

구분	등급	판단기준	점수
사용 인원	낮음	▪ 거의 없음(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보통	▪ 10인 미만	1
	높음	▪ 10인 이상	2
구역 사용 빈도	낮음	▪ 부정기적(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보통	▪ 매주 사용(주 3회 미만)	1
	높음	▪ 매일 사용(주 3회 이상)	2
평균 사용 시간	낮음	▪ 1시간 미만	0
	보통	▪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
	높음	▪ 4시간 이상	2



자료: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에서 발췌·재구성

이와 같은 석면 위해성 평가결과는 각각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복도, 지하 1층 보일러실 등)과 동일물질구역을 참고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다.

다.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교육부에서 2008년 10월 마련하고 5차례 개정한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에는 “나항”의 내용과 같은 석면건축물의 평가방법을 바탕으로 각각의 평가요소에 대한 착안 사항이나 예시가 [표 8]과 같이 제시되어 있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실에 대해 석면 위해성 평가를 수행²⁾하게 되어 있다.

[표 8] 물리적 평가의 손상 상태 관련 착안 사항 및 예시

구분	내용			
착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상 상태는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 여부에 따른 판단기준에 따라 없음, 낮음, 높음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수 부여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거나 손상을 보수한 경우, 설치물의 경우 손상된 단면의 노출이 없는 경우에는 0점 부여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미만으로 미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 2점 부여 (균열, 깨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들뜸 등 손상 단면이 노출된 경우)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이상으로 육안상 뚜렷한 손상이 있는 경우 3점 부여 			
예시	손상을 보수한 경우			
	손상이 없는 경우 (설치물)			

자료: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에서 발췌·재구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원 감사 기간(2020. 2. 3.~2. 11.) 중 ▷▷초등학교의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석면 위해성 평가결과와 석면 지도를 대조한 결과, [표 9]와 같이

2) 학교의 경우 교직원(학교 내 행정실 직원 또는 교사 등) 중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석면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음

실별로 석면 위해성을 평가하도록 한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과 달리 본관 1층에 대해 1개 지점만 평가(10개 지점 누락)하는 등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에 따른 계 35개 지점이 아닌 7개 지점의 석면 위해성만 평가(28개 지점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8월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실시되어 평가의 적정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표 9] >>초등학교의 석면 지도 및 석면 위해성 평가지점 비교

(단위: 개, 점)

구분		석면 지도기준			위해성 평가					
건물명	층	석면 건축자재	석면 구역	지점	석면 건축자재	지점	'18년 하반기		'19년 상반기	
							점수	등급	점수	등급
계				35		7				
본관	1F	천장재	행정실, 문서고, 1-1, 방송실, 교무실, 교장실, 사랑반, 도서관, 유치원 교실, 복도	10	천장재	1	3	낮음	7	낮음
		벽체	방송실	1						
본관	2F	벽체	-	1	벽체	1	2		7	
		천장재	보건실, 계단실, 도서관, 2-1, 3-1, 영어실, 꿈동산, 컴퓨터실, 복도	9						
별관	1F		민들레반, 양치실, 복도	3	1	7	7			
	2F		미술실, 4-1, 계단실, 5-1, 체육실, 6-1, 위클래스, 복도	8					1	
기타	1F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실, 창고	2	1	3	6			
	1F		합숙소 전실, 방1	1					1	

자료: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평가결과 및 경상북도 ■■■교육지원청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19개 학교³⁾의 석면 위해성 평가 실태 및 그 적정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부서에 의뢰하여 점검한 결과, [표 10]과 같이 15개 학교에서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과 달리 실별이 아닌 층별로 평가하여 계 698개 지점(최소 5개, 최대 133개)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된 >>초등학교, ▽▽초등학교 제외

[표 10] 15개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지점 누락 실태

(단위: 개)

교육청	학교	기존 평가(A)	재평가(B)	차이(B-A)
서울	▪ ◇◇초	6	27	21
	▪ ◁◁초	9	78	69
	▪ ♥♥고	15	48	33
	▪ ♡♡고	7	51	44
부산	▪ -고	11	51	40
	▪ -고	11	42	31
대전	▪ -고	9	14	5
경남	▪ -중	36	94	58
전남	▪ -중	9	28	19
	▪ -중	6	23	17
충남	▪ -고	5	82	77
경기	▪ -중	6	75	69
	▪ -고	6	22	16
	▪ -고	7	73	66
인천	▪ -고	11	144	133
계	15	154	852	698

자료: 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초등학교는 석면이 손상되고 비산성이 있는데도 물리적 평가 점수를 0점으로 하고 7점에서 15점인 평가 총점을 1점에서 4점으로 하는 등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18개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결과가 [표 11]과 같이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과 달리 부실하였고,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4개 학교(◁◁초, ◇◇초, ♥♥고, ♡♡고)는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데도 낮음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18개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실태

(단위: 점)

구분	교육청	학교	기존 평가		재평가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총별	서울	▪ ◇◇초	1~4	낮음	7~15	중간
		▪ ◁◁초	1		1~15	중간
		▪ ♥♥고	1		14	중간
		▪ ♡♡고	1		4~15	중간
	부산	▪ -고	1		5~11	낮음
		▪ -고	1		3~11	
	대전	▪ -고	1		4~7	
	경남	▪ -중	1~7		3~11	
		▪ -중	1~3		1~10	
	전남	▪ -중	1		1~11	
		▪ -고	2		1~11	
	충남	▪ -중	1		1~9	
		▪ -고	1~2		7	
		▪ -고	1		10	
	인천	▪ -고	1~13		8~11	
실별	광주	▪ -초	1	낮음	5~10	낮음
	전남	▪ -고	1~6		3~11	
	충남	▪ -고	1~4		1~11	

자료: 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부서에 의뢰하여 점검한 19개 학교 중 18개 학교에서 평가 누락 또는 부실 평가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석면 건축물이 있는 학교(2019년 6월 기준 9,936개 학교) 중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점검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실태 및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는 석면 위해성 평가를 실별이 아닌 총별로 실시하는 등 부실하게 수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 및 매뉴얼에 따라 실별로 면밀히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각 학교에서 6개월마다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의 결과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부실하게 관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육부 장관은

- ① 석면 위해성 평가 누락 또는 부실 관련 학교(▷▷초등학교, [표 10]과 [표 11]에 명시된 18개 학교)와 소관 시·도교육청에 대해 석면 위해성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 ② 석면 위해성 평가 부실 및 관리가 지적된 18개 학교의 점수([표 11] 참조)를 수정·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중간 등급인 4개 학교에 대한 긴급·적정 조치 포함)을 마련하며
- ③ 석면 건축물이 있는 학교(2019년 6월 기준 9,936개 학교) 중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점검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 실태 및 적정성을 점검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이해관계자의 안내서 개정작업 참여 부적정

소 관 기 관 교육부

조 치 기 관 교육부

내 용

1. 업무 개요 및 공익감사청구 요지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절차의 기술적 지식 및 방법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참여자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8년 5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9년 5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로 개정하였다.

이에 대해 ‘○○’ 소속 A 등 512명의 국민(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감리인(이하 “석면감리인”이라 한다) 역할을 기존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이 건 가이드라인과 안내서에 포함하였으며 이해관계인으로 보이는 □□ 협회장을 이 건 안내서 개정작업에 참여시켰다며 공익감사를 청구(2019. 8. 19.) 하였다.

2. 관계 법령과 지침(가이드라인, 안내서 등), 판단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 제5조에

따르면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석면감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 건 가이드라인과 안내서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면적이 50㎡ 이상 800㎡ 미만인 작업장도 석면감리인 지정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3조에는 [표 1]과 같은 석면감리인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표 1] 석면감리인의 업무

구분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 석면농도 기준 준수 여부 관리 ▪ 해당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 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자료: 관계 법령 및 고시 발체·재구성

이와 관련, 이 건 가이드라인과 안내서에는 [표 2]와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 해체·제거 작업 후로 나누어 석면감리인의 안전관리업무가 나타나 있다.

[표 2] 석면감리인의 안전관리업무 예시

구분	내용
작업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석면 조사 결과 및 석면 지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 지도 검토 결과, 필요시에는 부분적으로 석면 조사를 실시한다. ▪ 소속 감리원을 비닐 보양 작업 착수 시점부터 작업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작업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설비, 작업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설치되었는지 살핀다. ▪ 해체·제거 투입 인력이 신고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다. ▪ 비닐 보양, 실내 기자재 이동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작업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석면 모니터단과 합동으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고 합격·불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자료: 이 건 안내서 발체·재구성

그리고 이 건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부록의 “석면 해체·제거 감리 과업지시서 (예시)”에는 적용 범위, 작업 범위, 일반사항, 자격요건, 기록관리,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 업무 시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 협회의 「정관」 제2조에는 석면감리인 및 감리원의 능력 함양과 권익 보호가 협회 설립 목적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정관」 제4조에는 [표 3]과 같이 감리인 및 감리원 경력의 등록 및 관리, 안전한 석면 해체 작업을 위한 현장 감리가 협회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표 3] □□ 협회 사업

구분	내용
「정관」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리원 및 관련자의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2. 석면 해체·제거 작업 안전관리계획 컨설팅 3. 감리인 및 감리원의 경력 등록 관리 4. 석면 해체 작업 감리 현장 순회교육 및 기술지도 5. 석면 감리 및 해체·제거에 대한 조사·연구 6. 석면 감리 기술 매뉴얼 작성·발간 7. 석면 분야 정보제공을 위한 출판물 등의 간행 8.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 9. 석면 해체·제거 및 감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안전한 석면 해체 작업을 위한 현장 감리 사업

자료: □□ 협회 「정관」 재구성

이와 관련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표 4]와 같이 감리 관련 기준의 제·개정 과정에 관련 협회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를 작성자 또는 감수자로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조화·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국토교통부 등의 감리 관련 기준 제·개정 시 협회 관계자 참여 현황

구분	관련 기준	참여 방법
환경부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의견 조화
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의견 조화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의견 조화

자료: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안내서 개정 작업과 □□ 협회 간에는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있으므로 □□ 협회 관계자를 이 건 안내서 개정작업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20. 2. 3.~2. 11.) 중 2019년 5월 당시 이 건 안내서 개정작업의 참여자를 점검한 결과, [표 5]와 같이 작성자는 7명이고 감수자는 11명이었는데 감수자 중 ●●대학교 B 교수가 □□ 협회의 협회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2019년 안내서 개정 시 참여자 현황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수행 업무
1	작성자 (7명)	교육부 ○과	과장	-	안내서 개정 총괄
2		교육부 ○과	사무관	-	안내서 개정 행정적 지원 및 진행 상황 확인 등
3		교육부 ○과	주무관	-	안내서 개정 행정적 지원 및 진행 상황 확인 등
4		교육부 ○과	주무관	-	안내서 개정 행정적 지원 및 진행 상황 확인 등
5		-공제회 □부	본부장	-	안내서 개정 행정적 지원 업무
6		-공제회 □부	부장	-	안내서 개정 행정적 지원 업무
7		-공제회 □부	대리	-	안내서 개정 행정적 지원 업무
8	감수자 (11명)	●●대학교	교수	B	안내서 개정 의견 개진 및 현장 의견수렴 등
9		-대학교	교수	-	안내서 개정 의견 개진 및 현장 의견수렴 등
10		-대학교	교수	-	안내서 개정 의견 개진 및 현장 의견수렴 등
11		-공단	연구위원	-	안내서 개정 관계 법령 검토 등
12		-공단	과장	-	안내서 개정 관계 법령 검토 등
13		환경부 △과	사무관	-	안내서 개정 의견 개진 등
14		고용노동부 ▷과	주무관	-	안내서 개정 의견 개진 등
15		서울특별시교육청 ▽과	주무관	-	안내서 개정 의견 개진 및 현장 의견수렴 등
16		부산광역시교육청 ◁과	주무관	-	안내서 개정 의견 개진 및 현장 의견수렴 등
17		전라남도교육청 ◁과	주무관	-	안내서 개정 의견 개진 및 현장 의견수렴 등
18		경상남도교육청 ◁과	주무관	-	안내서 개정 의견 개진 및 현장 의견수렴 등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 교육부는 B 교수가 □□ 협회의 협회장이라는 지위는 고려하지

못한 채 석면안전관리위원회(근거: 「환경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환경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안내서 개정작업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B 교수는 이 건 안내서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3. 27.부터 같은 해 5. 21. 사이에 개최된 총 4번의 회의 중 한 번(2019. 3. 27.)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 교수가 석면관리인의 권익 보호나 역할 및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부당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의견을 제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 협회 관련자를 이 건 안내서 개정작업에 참여시킨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는 이 건 안내서 개정작업의 참여자가 소속된 협회의 설립 목적, 협회원의 역할, 금전적 이해관계 및 감독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관계의 충돌 소지가 인정되는 자 또는 그러한 자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협회 관계자를 이 건 안내서 개정작업에서 배제하고,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는 등 안내서 개정작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육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 협회 관련자를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개정작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감사 미 실시 사유 명세

1.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개정 부적정

청구사항 및 검토 결과

■ 청구 요지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완료한 학교의 56.3%에서 석면이 또다시 검출
- 그런데도 이 건 안내서는 석면 조사 방법에 관한 문구가 삭제되거나 의무조항(해야 한다)이 예외조항(할 수 있다)으로 변경되는 등 기존 가이드라인에 비해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40건에 달하는 “가이드라인-안내서 개정내용 분석표”를 제출

주요 개정내용 예시

구분	2018년 가이드라인	2019년 안내서
① 먼지 조사	석면 잔재물 검사 시 먼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관련 문구 삭제
② 사전 청소 시	이동 가능한 모든 비품 이동	이동이 어려운 것은 제외
③ 보양 비닐	투명 비닐 시트(2겹)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 시트(2겹)

■ 검토 결과

- 교육부에서 관계 지침(「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길잡이」 등)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고 그간 석면 해체·제거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해소·반영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 ① 먼지 조사의 경우 법적 관련 규정이 없고 안전성 확인 기준이 부재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삭제, ② ‘모든’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이동이 불가능한 집기 이동 요구 등 혼선이 발생하여 표현을 보완, ③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길잡이」 등 관련 지침에 따라 개정

△ 이 건 안내서와 가이드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거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이 건 청구사항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 제1호에 따라 기각

2.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활용 부적정

청구사항 및 검토 결과
<p>▪ 청구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는 이 건 안내서까지 발표하고 일선 학교는 이를 반영하여 안전하게 공사하겠다고 했지만, 학교 모니터단에는 이 건 안내서를 미배포하였고 실제로는 다른 책자로 교육하거나 책자도 아닌 소량의 프린트물로 교육 <p>▪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교육은 교육부 주관으로 교육부에서 강사를 섭외하고 교육자료를 제작함과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며 실시하는 것으로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배포한 교육자료(안내서 주요 내용을 포함)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별도의 교육자료를 제작한 사실이 없음 -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 건 안내서 전문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이 건 안내서 활용 및 교육이 특별히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곤란 <p>⇒ 이 건 청구사항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 제1호에 따라 기각</p>

3. 석면 지도 재검증 절차 이행 여부

청구사항 및 검토 결과
<p>▪ 청구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 따르면 석면 지도 검증·완료 학교에 대해서만 석면 공사 학교로 선정하겠다고 되어있지만, 2019년 여름방학 중에 공사한 학교의 석면 지도 검증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p>▪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건 안내서에는 석면 지도 검증을 완료하지 않은 학교는 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증을 완료한 후에 공사 대상학교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19년 여름방학 중에 공사한 436개 학교 중 196개 학교가 사전에 석면 지도 검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문제는 사전에 석면 지도 검증을 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검증을 하고, 검증결과 무석면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무석면 학교로 인증함과 아울러 검증 완료 전까지는 석면건축물로 관리한 계획임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실익이 없음 <p>⇒ 이 건 청구사항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 제1호에 따라 기각</p>

4. 석면감리인에 대한 소극적 처벌 여부

청구사항 및 검토 결과
<p>▪ 청구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부터 2019년 5월까지 4백여 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석면감리인이 현장책임자인데도 처벌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 <p>▪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석면감리인에 대한 처벌 사례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의 보완을 요청했으나 보완자료 미제출 <p>⇒ 이 건 청구사항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 제1호에 따라 기각</p>

5.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 부적정

청구사항 및 검토 결과
<p>▪ 청구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 자격으로 1명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40개 학교 중 32개 학교의 모니터단으로 활동하였는데 1개 학교당 4회 참석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 <p>△ 참여 횟수를 0.3회, 0.2회 등으로 표기한 것 자체가 부실 활동을 반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단체의 대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도에도 다수의 시·도교육청 주관 석면 교육에 교육부와 환경부의 추천 강사로 활동, 교육부 안내서 TF에도 참여 <p>▪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8년 여름방학 기간 석면 교체 40개 학교에 대해 시민단체 소속 4명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였으나 이 중 3명이 활동 중 탈퇴하게 되면서 남은 1명이 나머지 학교에 대한 모니터단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남은 1명이 모든 학교의 전 공정(사전설명회, 사전 청소, 비닐 보양 및 잔재물 조사 등)에 각각 4회 이상 참여하였는데 <p>△ 자료 작성 서식에 대한 오해로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다수의 활동을 나누어 기재한 것으로 특별히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곤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고 해당 단체의 대표가 교육부와 환경부의 추천을 받아 석면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이 건 안내서 개정 TF에도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도 관계기관의 업무처리가 특별히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곤란 <p>⇒ 이 건 청구사항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 제1호에 따라 기각</p>